

「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」로 연구개발활동 지원

- 국세청, 2021. 2

- (개요) 국세청(청장 김대지)은 지난해부터 연구·인력개발비(R&D)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.
- (혁신성장기업 등 중소기업 지원) 올해부터는 각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R&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전담팀을 신설하였습니다.
 - 혁신성장기업 등 중소기업에 대한 사전심사를 보다 신속·정확하게 심사하여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고,
 - 특히, 기업에게 R&D 관련 세무상담 등 자문서비스를 제공하여 연구개발·투자 활동에 주력하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.
- * (본청) 일반·중견기업 사전심사 및 재심사, (지방청) 중소기업 사전심사
- (신청방법)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는 법인세(소득세) 과세표준 신고기한 전까지 홈택스(Hometax), 우편,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.
- (혜택)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법인세(소득세)를 신고한 경우 ①사전심사 신청 내용에 대해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, ②이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되는 혜택이 부여됩니다.
 - * 다만, 심사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, 사실관계의 변경·누락 및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.
 - 신설된 전담팀을 통해 R&D 세액공제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자에게 친화적인 행정을 적극 구현해 나가겠습니다.

1 「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」 제도

■ 「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」 제도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

- (도입 취지)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은 일반적으로 대량의 자금 투입과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 연구성패의 불확실성이 높아 연구개발 투자활성화를 위해
 - 내국법인과 거주자가 연구·인력개발에 투자하는 비용의 일정액을 법인세(소득세)에서 공제함으로써,
 - 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촉진하여 기술을 축적하고 우수한 인력 확보를 도움으로써 기업의 대외경쟁력 향상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도입된 조세지원 제도입니다.

Ⅰ 연도별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모 Ⅰ

(개, 억 원)

| 구분 | 2017년 | | 2018년 | | 2019년 | |
|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| 기업수 | 공제액 | 기업수 | 공제액 | 기업수 | 공제액 |
| 계 | 32,891 | 23,067 | 36,087 | 23,865 | 42,134 | 23,207 |
| 개인 | 4,749 | 795 | 5,734 | 867 | 8,012 | 902 |
| 법인 | 일반 | 1,535 | 10,140 | 1,519 | 10,813 | 1,453 |
| | 중소 | 26,607 | 12,132 | 28,834 | 12,185 | 32,669 |
| | | 12,647 | | | | |

* 출처: 국세통계연보

- (세액공제액의 계산)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,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, 임원 또는 사용인의 교육·훈련을 위해
 - 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운영하거나 타기관과 공동연구하면서 인건비, 재료비 등을 지출한 경우에
 - 당해 과세연도의 법인세(소득세)에서 세액공제액*을 차감하게 되므로, 조세절감 효과가 큰 제도입니다.

2 「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」 제도와 「지방청 전담팀」 신설

■ 「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」 제도 및 「지방청 사전심사 전담팀」 신설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

- (제도 도입)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는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
 -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국세청이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로서 지난해 도



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.

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【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】Ⅰ

⑭ 법 제10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제11항에 따른 신고를 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·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심사 방법 및 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. <신설 2019. 2. 12>

- 신청 사업자의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여, 연구·인력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입된 조세지원 제도입니다.

■ (지방청 전담팀 신설)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(개인사업자 포함)에게 신속·정확한 사전심사로 성실신고를 지원하고,

-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세무상담 등 자문서비스를 제공하여, 사전심사 신청 기업이 연구개발 투자와 인적자원 투자에 주력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 전담팀을 신설하였습니다.

* (본 청) 일반기업·중견기업 사전심사, 지방청 기술심사 지원

* (지방청) 중소기업·개인사업자 사전심사, 중소기업 세무상담

■ (사전심사 필요성) 다른 세액공제·감면제도가 대부분 기업 규모, 업종, 수입금액 등 형식적 요건만 규정하는 것과 달리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실질적 요건까지 부합해야 합니다.

-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조세절감 효과가 탁월한 반면, 공제대상 비용 범위, 연구·인력개발 활동 여부 등에 대해 사업자와 과세관청 간 견해 차이가 상당히 큰 규정으로,
- 추후 세무조사 등으로 세액공제가 잘못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, 수년간 공제받은 세액은 물론 가산세까지 추징되어 사업자에게 법인세(소득세) 부담이 가중되므로
- 「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」 제도를 이용하여 사전에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확인 받아 해소할 수 있습니다.

Ⅰ 「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」의 형식적·실질적 요건 Ⅰ

■ (형식적 요건) 신청인이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서 조특법 시행령 【별표6】요건에 규정된 비용 검토

■ (실질적 요건) 기업이 수행하는 활동이 조특법 제2조 제1항 연구·인력개발 활동 정의에 부합 여부 검토

Ⅰ 타 세액공제 제도와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비교 Ⅰ

| 타 세액공제 제도의 요건 |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요건 |
|--|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고용 관련 세액공제(급여, 근로자수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조특법 § 29의4[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] ■ 투자 관련 세액공제(기업규모, 업종, 수입금액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조특법 § 24[통합투자세액공제]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연구·인력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에게 혜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형식) 연구소 인증(공간, 인력) - (실질) 연구·인력개발 활동 수행 |

* 2020. 12. 29. 세법개정 반영

■ (세액공제 불인정 사례) 지난해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결과, 주요 불인정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.

사례 ①

타사의 국가 연구개발 과제 내용 복제 및 재현

- ☒ ◇◇◇ 검사용 부품을 개발 중이나, 해당 내용은 국가 연구개발 과제(공개)로 타법인이 이미 개발 완료한 사항임에도, 해당 보고서 내용을 복제하여 연구개발보고서로 제출
- 국가 연구개발 과제로 타 업체가 이미 수행하여 결과가 공개된 연구 내용을 재현 및 복제한 활동은 과학·기술적 진전을 위한 자체 연구개발로 불인정

사례 ②

위탁받아 수행한 연구개발 활동

- ☒ 연구를 수탁받아 수행하는 활동은 실패의 위험과 결과물의 소유권이 모두 위탁업체에 있으므로, 수탁업체는 자체적 연구 활동 여부에 관계없이 연구개발 활동으로 불인정

사례 ③

주주인 임원을 전담연구원으로 등록한 인건비

- ☒ 임원인 대표이사 甲(법인 주식 20.0% 보유), 상무 乙(법인 주식 11.0% 소유)의 인건비에 대해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
- 당해 법인의 주식을 10.0%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임원의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인건비 불인정

사례 ④

연구전담부서로 등록하지 않은 기업에 지출한 위탁개발비

- ☒ 연구개발 과제를 연구전담부서로 등록되지 않은 기업에 연구개발을 위탁하고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
- 연구전담부서가 없는 기업에 위탁한 위탁연구개발비는 불인정



사례 ⑤

연구시설 건물 임차료를 재료비로 계정과목 분류

- ☑ 연구소 건물 임차료에 대해 재료비로 분류하여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
- 연구시설 건물의 임차료는 세액공제되는 연구·시험용 시설의 임차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불인정

- (혁신성장기업 등 중소기업 지원) 국세청은 신설된 전담팀을 통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(개인 사업자 포함)이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사전심사에 대한 혜택을 받도록 지원하겠습니다.
- 기업이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법정 요건에 맞는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성실납세 문화가 확산되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.
 - 또한, 사전심사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사업자에게 친화적인 행정을 적극 구현해 나가겠습니다.

3

「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」의 신청

- 「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」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
- (신청인) 사전심사는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- *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,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사업자의 판단에 의해 세액공제 대상으로 신고 가능
 - (신청기한) 법인세(소득세) 과세표준 신고 전까지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- 다만,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누락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, 수정신고, 기한 후 신고 전까지 가능합니다.
 - *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법인세(소득세) 과세표준 신고 시 신청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사 신청 가능
 - (신청방법) 홈택스(www.hometax.go.kr), 우편, 방문접수(세무서 민원봉사실, 본·지방청 법인세과)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- (신청비용) 연구·인력개발을 위해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 비용, 전체 비용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신청도 가능하며, 금액제한은 없습니다.
 - (신청서류) 「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서», 「연구개발비 명세서», 「연구개발 보고서», 기타 세액공제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*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 -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(www.nts.go.kr)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4 「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」의 심사 절차

- 「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절차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
- (심사 관할) 중소기업, 개인사업자의 사전심사에 대해서는 각 지방청 법인세과 사전심사 전담팀에서 심사하고,
 - 일반기업,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 법인세과 공익중소법인지원 4팀에서 심사합니다.
- (구분 심사) 사전심사를 신청한 ‘연구·인력개발비’에 대해 기술검토 및 비용검토로 구분하여 심사합니다.
 - (기술 검토) 신청인의 연구·인력개발 활동이 「조특법」의 ‘연구개발’, ‘인력개발’ 정의 [참고1]에 맞는지를 기술 검토하고,
 - (비용 검토) 신청인이 연구·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이 「조특법」에 해당하는 공제 대상 금액인지를 검토하게 됩니다.
- (연구·인력개발비의 구분) 연구·인력개발비는 ‘신성장·원천기술 연구개발비*’와 ‘일반 연구·인력개발비’로 구분되며,
 - * 「조특법 시행령」 [별표 7]에 의한 ‘신성장·원천기술 분야별 대상 기술’에서 규정한 12개 분야 223개 기술

┃ 「신성장·원천기술 연구·인력개발비」와 「일반 연구·인력개발비」의 비교 ┃

| 구 분 | 정 의 | 세정지원 | 검토 기관 |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|-----------|
| | | | 비용 | 기술 |
| 신성장·원천기술 연구·인력개발비 | 12개 분야 223개 기술에 대한 연구·인력개발비 | · 당기에 지출한 연구·인력개발비의 최대 40% 세액공제 | 국세청 | 한국산업기술진흥원 |
| 일반 연구·인력개발비 | 신성장·원천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·인력개발비 | · ① 당기에 지출한 연구·인력개발비의 최대 25% · ② 전년 대비 증가한 연구·인력개발비의 최대 50% → ①, ② 중 선택하여 세액공제 | 국세청 | 국세청 |

- 일반 연구·인력개발비보다 세제상 혜택이 큰 ‘신성장·원천기술 연구개발비’에 대한 기술검토*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별도*로 심사합니다.
- *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외부전문가를 활용해 심사 진행
(근거규정: 「조특법 시행령」 제9조 제12항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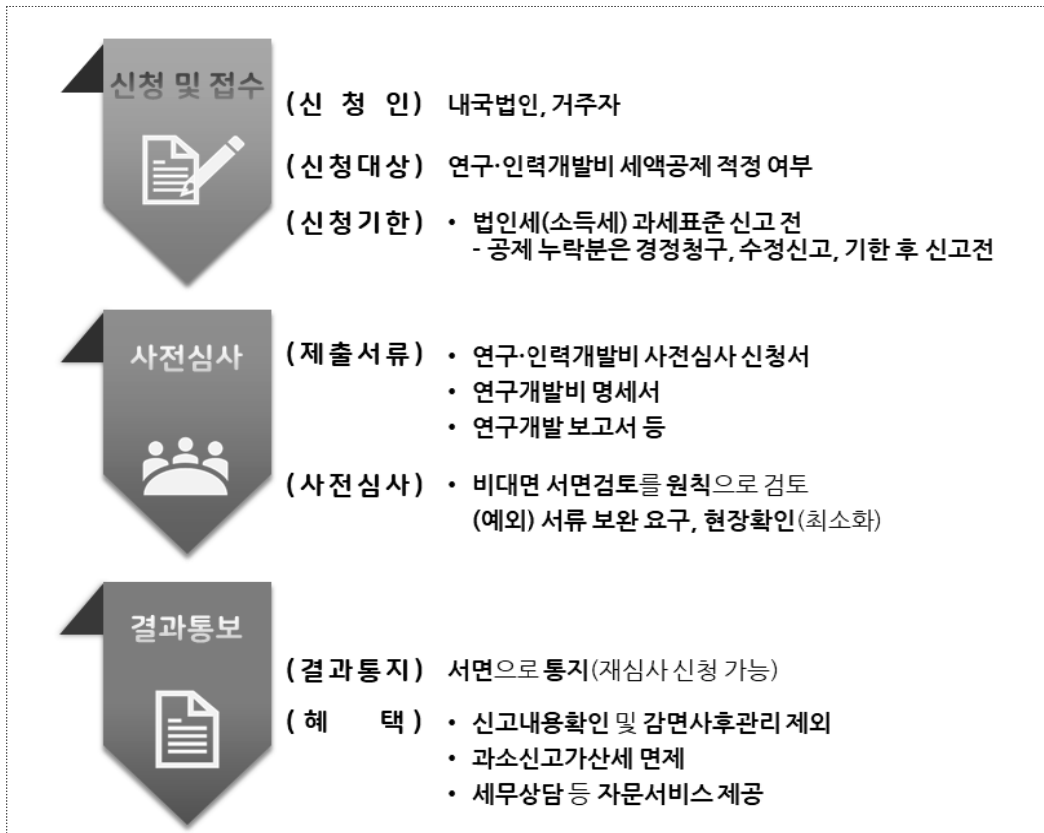


■ 사전심사는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하는 서면심사*를 원칙으로 진행합니다.

* 다만, 제출서류에 의해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보완요구하거나 현장확인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.

- 심사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사전심사의 주요 검토사항 및 향후 진행과정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,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세무상담 등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-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.

Ⅰ 「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」 업무처리 절차 Ⅰ



5

「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」의 혜택

■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으로 「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」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

■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을 반영하여 법인세(소득세)를 신고한 경우 아래와 같은 효력이 부여됩니다.

- * 다만, 심사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, 사실관계의 변경·누락 및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
- 1. 법인세(소득세) 신고 전 사전심사를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조세절감 효과 등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.
- 2. 심사 결과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함께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세무상담 등 자문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.
- 3. 사전심사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* 및 감면사후관리**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 - * 사업자가 신고한 오류 또는 누락 혐의에 대해 수정신고를 안내하고,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하여 사업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제도
 - ** 감면요건의 일치 또는 중복공제·감면 여부 및 사후 법적의무의 이행여부를 서면 또는 현장확인 방법으로 확인하는 제도
- 4. 심사 이후 조사 등으로 인해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이 되더라도,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됩니다.

6 향후 국세청의 추진계획

■ 향후 국세청의 추진계획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

■ 신청인이 이 제도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,

- 국세청 누리집(www.nts.go.kr) 안내코너*에 그간의 사전심사 사례(인정·불인정)를 게시하여 기업의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이해를 돕겠습니다.
 - * (접근 경로) 국세신고안내>법인신고안내>법인세>R&D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
-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안내 게시판에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간이계산기를 만들고,
 - 「인터넷 접수목록 조회 화면」을 통해 심사 단계별 진행사항을 안내하여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납세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.

■ 향후, 새로운 내용이 추가 반영된 「R&D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례집」을 매년 발간하고,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며,

- 기술 검토를 위해 채용한 산업분야별 전문 기술인력 5명*을 활용하여,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가 더욱 정밀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 - * 기계 분야, 정보통신 분야, 전기·전자 분야, 화학 분야, 생명공학 분야
- 신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하는 등 사업자 친화적 제도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.



-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법인세과 공익중소법인지원 4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☎ 044-204-3923~9)

참고 - 「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」 제도 개요

- 연구개발, 인력개발의 정의(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11호, 제12호)
- (연구개발)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
 - (인력개발)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·훈련시키는 활동
-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
- 내국법인과 거주자가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[별표 6] [참고3]의 비용
-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비율
-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비율

| 구 분 | 중소기업 | 중견기업 | 일반기업 |
|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신성장· 원천기술 연구개발 | 신성장·원천기술 연구개발비 × (㉗ + ㉘) | | |
| | ㉗ 30% | ㉗ 20%(코스닥상장중견기업 25%) | |
| | ㉘ Min ($\frac{\text{연구개발비}}{\text{수입금액}}$ × 3, 10%(코스닥상장중견기업 15%) | | |
| 일반 연구·인력 개발 | ㉗와 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 | | |
| | ㉗ 증가분 방식: (해당 과세연도 발생비용 - 직전 과세연도 발생비용) × ㉗ | | |
| | ㉗ 50% | ㉗ 40% | ㉗ 25% |
| | ㉘ 당기분 방식: 해당 과세연도 발생 일반 연구·인력개발비 × ㉘ | | |
| | ㉘ 25% | ㉘ 8% | ㉘ Min ($\frac{\text{연구개발비}}{\text{수입금액}}$ × 50%, 2% |

- ① 중소기업: 매출액이 업종별로 정한 기준금액 이하*이고, 자산총액이 5천억 원 미만
(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, 소비성서비스업 영위기업은 제외)
- * 제조업: 8백억~1천5백억 원, 건설·도소매업: 1천억 원, 서비스업: 6백억 원 이하 등
- ② 중견기업: 중소기업이 아니며,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5천억 원 미만인 기업
- ③ 일반기업: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